

청소년·노인 일하는 곳, 최저임금 더 안 지켜진다

광주 취약업종 노동자·사업주 실태조사

광주지역 취약업종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청소년과 노인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과 아파트 경비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12일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발표한 '2024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 모니터링'에 따르면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은 86.9%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5.6% 감소했다.

센터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광주지역 취약업종(편의점, 마트, 카페, 아파트 건물 경비, 청소미화, 제조업 등) 노동자 394명과 사업주 93명 등 총 4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준수율 86.9%...전년비 5.6% 줄어 편의점·아파트 경비업 등 7.0% "최저임금도 못 받아"

'최저임금을 받고(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9%, 받지(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0%였다. 청소년 알바 직종 중 하나인 편의점은 84.6%로 2년 연속 80%대를 기록한 반면 노인 노동이 많은 아파트 건물 경비, 청소미화의 경우 7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나머지 6.1%는 '모르겠다'·'무응답'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 준수율은 제조업이 97.5%로 가장 높았고 프리랜서가 73.9%로 가장 낮았다. 노인 노동이 많은 아파트 건물 경비(74.2%), 청소미화(77.5%)가 프리랜서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은 2018년(76.3%)부

터 2021년(86.7%)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지난 2022년 85.5%로 소폭 꺾였다가 2023년 92.5%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약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50%가 '사업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38.7%), '하는 일이 최저임금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12.9%)순으로 업주가 최저임금을 안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한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 후 노동환경에 변화가 있었다(16.2%)고 답한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단축'(37.2%), '휴게시간 연장'(22.1%), '업무 증가'(9.7%), '유급휴가 사용'(8.8%)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감원이 있었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7.2%가 감원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 증가해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감원율을 보였다. 고용원이 있었지만 감원으로 1인 사업장이 된 경우도 10.7%였다.

반면, 업주들이 꼽은 운영에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는 '원자재 및 물가 상승'(33.3%), 임대료(18.3%), 제세금 및 공과금(16.1%), 카드 수수료

(15.1%)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14.5%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본인 혹은 가족이 일하는 경우가 59.0%,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알바 고용(13.7%), 사업장 영업시간 감소(7.7%) 등의 응답을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노동자 59.9%, 사업주 44.1%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내년 희망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는 1만원(31.2%)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만 500원(21.1%)이었다. 사업주는 현재 금액을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55.9%로 우세였고 1만원은 28%로 뒤를 이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폭염과의 전쟁 시작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2일,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정동동의 한 축사에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5·18조사위, 계엄군 14명 고발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5·18 당시 학살을 자행했거나 가담했던 계엄군 1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12일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용 11공수여단장, 20사단 소속 두 연대장 등 6명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됐다. 최용씨를 비롯한 계엄군 9명은 주남마을과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집단살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5·18기법재단(재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5·18 계엄군 고발 건을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검찰총장은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명해 배당하고 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를 다시 적용하거나 수사지연을 한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신속히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심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투신하면 물에 뛰어 들어서라도 구하려 했죠"

진도소방서 윤장군 소방사 신안 천사대교서 남성 구해

진도소방서 윤장군(30·사진) 소방사가 휴일날 밤 신안군 천사대교에서 투신하려는 사람을 막아 세워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광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소방사는 지난 11일 밤 11시께 천사대교 중간 지점에서 남성 A씨가 투신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했다.

윤 소방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천사대교 인근에 옷가지와 신발 등을 벗어 흠뻑 젖었으며,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수상한 김새를 파악한 그는 A씨가 충동적으로 물에 뛰어들지 않도록 먼 곳에 차를 대 놓고 천천히 다가가 단숨에 어깨를 붙잡았다.

윤 소방사는 양 팔로 A씨를 단단히 붙잡고 투신을 못 하도록 막은 뒤, 여자친구에게 119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A씨가 "놓아달라"며

저항하자 윤 소방사는 소방관이라고 밝히고 더 단단히 붙잡았다.

윤 소방사는 "혹시라도 팔에 힘이 풀려서 A씨를 놓치진 않을까 걱정됐다"며 "A씨가 끝내 투신하면 물에 뛰어 들어서라도 구해

야겠다는 생각이 하고 있었다"고 긴박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다행히 경찰과 구급대가 제 시간에 도착해 A씨는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됐다.

윤 소방사는 2021년 5월 소방관으로 임용됐으며, 임용 이전인 2016년에도 목포시 북항의 한 횡집에서 일을 하던 중 낙자를 먹다 기도가 막힌 손님을 긴급 구조했다.

윤 소방사는 "오직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소방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청렴도 하위권 GIST, 이번엔 부속기관장 '짜맞추기' 채용

전 보직교수 징계 조치

광주과학기술원(GIST) 보직교수들이 '짜맞추기'식 부속 기관장 채용 등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12일 GIST에 따르면 GIST 징계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 보직교수 4명에 대해 징적 1개월, 감봉 1개월, 경고(2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징적과 감봉 처분을 받은 2명은 부속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설정해 다른 지원자의 응모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속 기관장은 지난해 퇴직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2명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명예 석좌교수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인 명예 석좌교수는 2022년 9월 임명됐다.

징계 대상자들이 부속기관장 공채와 명예석좌 교수에 개입한 배경과 이유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GIST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 달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부터 실지(實地) 감사를 받고 지난 2월 말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어 지난 3월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대상자들의 소명 자료를 첨부해 재심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를 열었다.

GIST측은 "2022년 하반기 중 진행된 채용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절차상 하자 와 규정 미준수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GIST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청렴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개선을 위해 GIST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과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향후 종합청렴도 3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총장이 직접 청렴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